정책브리핑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정책브리핑 | 2022-8호 | 2022년 5월 25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노웅래 | idp.theminjoo.kr

청년이 원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고승연 연구위원(사회복지학 박사)

〈요 약〉

■ 본 고는 **'국가정책 방향, 국가정책의 시급성,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 4가지 영역**의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 집단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국가정책 및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

- (1)국가정책 방향으로 청년들은 **'경제성장', '선별복지', '도덕', '공정'**을 선호, **비청년층에 비해 '능력', '성장' 선호**도가 높고 **여성·미취업 청년이 '도덕'과 '공정' 선호**도가 더 높은 편임
- (2)가장 시급한 국가정책으로 **청년층은 '부동산 정책', 비청년층은 '불합리불공정 시정'**을 선택, **'부동산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여성에게 더 시급**함
- (3)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연령층과 상관없이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 대체로 **여성·비수도권·미취업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필요도가 높은 편임
- (4)가장 필요한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로 모든 연령층에서 **'다양한 청년 집단의 고려'**를 선택, 특히 **여성·미취업 청년**들의 응답이 많았고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함

■ **정책적 시사점**

- '공공기관 채용확대', '1인당 지원금 확대'를 비롯한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층의 60% 이상이 공감**,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대안없는 비판'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은 불가**함
- 청년층 중 3명 중 1명은 '성장' 가치를 선호, '공정' 가치에 매몰된 단편적 주장이 아니라 **공정과 성장이 공존하는 '함께하는 성장형 청년 일자리'로서 새로운 일자리 비전**이 필요함
- 민간일자리 개발을 위해 강조되어 온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용인센티브를 대기업으로 확대·강화함으로써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 성별 청년 집단간 인식 차이 뚜렷, **청년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불리함 때문에 **불공정 및 부패에 더 민감, 출산·육아로 상대적으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들에서 소외** 가능, **육아·가사·돌봄의 통합 지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 고도화** 등이 필요함
- **비수도권 청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및 비수도권 '청년채용장려금' 확대를 추진**,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수도권 특화 상생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취업 청년에게 부동산보다 '일자리 정책'이 시급, **'채용지원금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1인당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고**, 특히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무형 일경험(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청년 4명중 1명은 **인턴·실무경험 부족으로 구직하기 어렵다**고 호소, 新정부가 '세금일자리' 라고 비난하는 **정부 재정지원의 청년 일자리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사구시의 최우선 정책**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개 요

○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정책 필요도와 선호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시작, 비청년층 및 청년층간 비교와 함께 청년 세부 집단간 차이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필요

-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정책 선호도는 비청년층과 차이 존재, 또한 청년 집단내에서도 성별, 취업여부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
- 본 고는 국가정책 방향, 국가정책의 시급성,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의 4가지 영역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1]를 토대로, 청년 세부 집단별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이 목적

2. 국가정책 및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호도

1)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도

○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선별복지', '도덕우선', '공정우선' 이며, 비청년층에 비해 '능력우선', '성장우선' 선호가 多

- '도덕우선' 을 선택한 청년층이 72.1%로 비청년층의 90%이상인 것에 비해 낮은 편, 청년층의 5명 중 1명은 '능력우선(유능하면 어느 정도 부패해도 괜찮다)' 에 찬성
- 청년층 3명 중 1명(31.7%)는 '성장우선' '공정우선' 을 선택, 비청년층(74.5%)과 큰 차이
- 청년의 절반(49.6%)이 '도덕우선 + 공정우선' 을 선택, '도덕우선 + 성장우선' 은 17.6%, 10명 중 1명(12.7%) 이상은 가장 급진적인 '능력우선 + 성장우선' 을 선택[2]

○ 청년 남성보다 여성이, 수도권 청년보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정책 선호도가 좀더 뚜렷,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미

- 청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도덕우선', '공정우선' 의견 뚜렷, 불공정 및 부패에 민감
- 비수도권 청년은 '잘 모르겠다' 는 의견이 10%이상으로 중립적인 의견이 많으나, '선별복지, 도덕우선, 공정우선' 의견이 수도권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

---

1) 본 보고서는 민주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국민 정책 인식 조사'의 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조사 개요 및 응답자 분포는 [부록] 참고.

2) <표> 청년층의 '능력우선vs.도덕우선', '공정우선vs.성장우선' (%)

	능력우선	도덕우선	모르겠다
공정우선	8.1	**49.6**	1.9
성장우선	**12.7**	**17.6**	1.4
모르겠다	.5	4.9	3.3

주) 모든 셀의 합 = 100%

<표 1> 국가정책 방향

Q. 귀하께서는 "OO과 OO" 중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 청년층 vs. 비청년층 (%) >

주1) 그래프의 맨 윗층은 '잘 모르겠다'
주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

< 청년층의 성별·지역별·취업여부별 비교 (%) >

		N(명)	성별*		지역**		취업여부***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	미취업
경제성장 vs. 소득분배	경제성장	184	57.4	41.9	51.7	47.5	54.3	38.2
	소득분배	133	34.7	37.4	36.8	35.0	34.5	40.2
	모르겠다	52	7.9	20.7	11.5	17.5	11.2	21.6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보편복지	149	44.7	35.8	44.5	35.0	40.4	40.2
	선별복지	190	46.8	56.4	49.8	53.8	51.3	52.0
	모르겠다	30	8.4	7.8	5.7	11.3	8.2	7.8
능력우선 vs. 도덕우선	능력우선	79	27.9	14.5	23.9	18.1	22.8	17.6
	도덕우선	266	65.3	79.3	71.8	72.5	71.9	72.5
	모르겠다	24	6.8	6.1	4.3	9.4	5.2	9.8
공정우선 vs. 성장우선	공정우선	220	53.7	65.9	58.4	61.3	59.2	60.8
	성장우선	117	38.9	24.0	35.4	26.9	33.7	26.5
	모르겠다	32	7.4	10.1	6.2	11.9	7.1	12.7

주1) 미취업자: 주부, 학생, 무직자
주2) 비수도권: 경상, 전라, 충청, 강원/제주지역
주2) 각 분야별 응답 합=100%
주3) *성별은 능력vs.도덕, 공정vs.성장, **지역별로는 보편복지vs. 선별복지, 능력vs.도덕, 공정vs.성장에서, ***취업여부별로는 경제성장vs.소득분배의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p<0.1)

2) 국가정책의 시급성

○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으로 청년층은 '부동산 정책(35.8%)' 비청년층은 '불합리·불공정 시정(34.1%)'을 선택, '일자리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연령층간 온도 차이

- 청년층은 청년과 관련된 현안인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젠더정책', '육아정책', '사회적 약자 정책'을 좀더 시급한 정책으로 선택
- 두 집단간 '젠더 정책'과 '불공정·불합리 적극적 시정', '정치적·경제적 특권 차단'에서 의견 차이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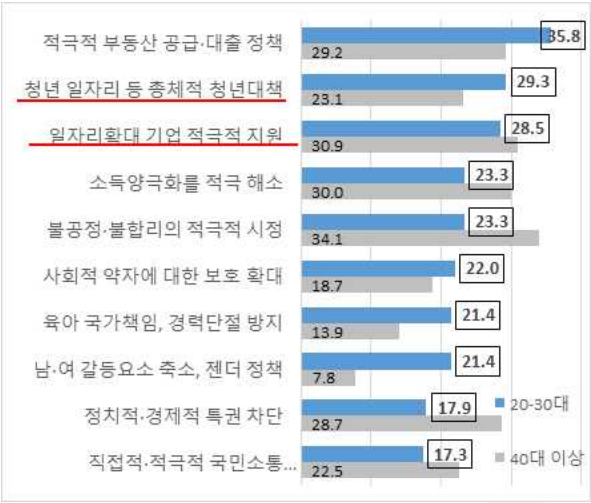
○ 청년 집단간 견해 차이가 큰 편, 특히 '부동산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여성에게 더 시급

- 청년 여성이 '부동산' 및 '일자리'에 대한 시급성을 더 크게 인식, 또한 '육아정책'은 청년 여성이, '젠더 정책'은 청년 남성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
- 비수도권 청년 및 미취업 청년들이 '청년 및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
- 취업 청년들은 '부동산 정책'과 '육아정책'의 시급성을 미취업 청년들에 비해 크게 인식, 취업 여부에 따른 정책 필요도 차이도 큰 편

<표 2> 시급한 국가정책

Q.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3개만 골라주십시오.

< 청년층 vs. 비청년층 (%) >



< 청년층의 성별·지역별·취업여부별 비교 (%) >

	N(명)	성별		지역		취업여부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	미취업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대출 정책	132	**30.0**	**41.9**	**34.9**	**36.9**	**37.8**	25.8
청년 일자리 등 총체적 청년대책	108	27.4	**31.3**	**28.2**	30.6	25.5	**33.3**
일자리 확대 기업 적극적 지원	105	**28.9**	27.9	25.8	**31.9**	**25.8**	30.0
소득양극화의 적극적 해소 정책	86	22.1	24.6	24.9	21.3	23.2	20.0
불공정·불합리 적극적 시정	86	27.4	19.0	22.0	25.0	24.0	18.3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정책	81	21.1	22.9	21.1	23.1	20.2	22.5
육아 국가책임, 경력단절 방지	79	15.3	27.9	20.1	23.1	23.2	14.2
남·여 갈등요소 축소, 젠더 정책	79	23.7	19.0	22.0	20.6	19.9	21.7
정치적·경제적 특권 차단	66	14.7	21.2	17.7	18.1	19.9	10.8
직접적적극적 국민소통 정치/행정	64	14.2	20.7	17.2	17.5	16.9	15.8

주1) 응답자가 보기 중 3개씩 선택한 결과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계산한 비중임
주2) 위 항목들 외에 소수 의견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해외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경제외교 대책', '타협하고 양보하는 정치', '일본과의 대립 완화의 능동적 외교', '북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있음

3)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도

○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청년층 및 비청년층 모두 민간일자리 개발과 관련된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 '공공기관 채용확대'에 대해서는 청년층(59.2%)과 비청년층(51.8%)간에 유의한 차이

- '채용기관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두 집단 모두 가장 긍정적,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 지원을 선호
- '공공기관 채용확대'에 대해 청년층의 동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적은 편이나 60%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응답
- '지원금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는 연령층에 상관없이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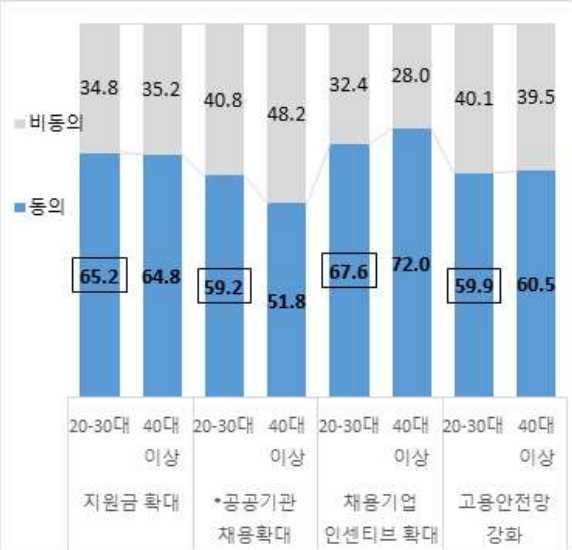
○ 청년내 집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확대',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의견 차이 뚜렷, 특히 여성·비수도권·미취업 청년들의 필요도가 높은 편

- 미취업 청년은 '취업지원금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70%이상, '공공기관 채용확대'에 대해서는 66.7%가 동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편
- 청년 여성은 '공공기관 채용확대'에 대해 65.9%가 동의한 반면, 청년 남성은 49.5%로 큰 차이
- 비수도권 청년들은 '공공기관 채용확대',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에 좀더 긍정적

〈표 3〉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Q. 귀하는 다음 청년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년층 vs. 비청년층 (%) >



< 청년층의 성별·지역별·취업여부별 비교 (%) >

		N(명)	성별*		지역**		취업여부***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	미취업
취업 지원금 확대	동의	184	60.0	64.2	61.2	63.1	56.9	75.5
	미동의	133	35.8	30.2	36.8	28.1	39.3	16.7
	모르겠다	52	4.2	5.6	1.9	8.8	3.7	7.8
공공기관 채용확대	동의	149	49.5	65.9	55.0	60.6	53.9	66.7
	미동의	190	49.5	29.1	43.5	34.4	43.8	28.4
	모르겠다	30	1.1	5.0	1.4	5.0	2.2	4.9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동의	79	62.6	64.2	62.2	65.0	61.4	68.6
	미동의	266	34.2	26.3	34.4	25.0	33.7	21.6
	모르겠다	24	3.2	9.5	3.3	10.0	4.9	9.8
고용안전망 강화	동의	220	53.7	59.8	55.0	58.8	50.9	71.6
	미동의	117	41.1	34.6	41.1	33.8	44.9	19.6
	모르겠다	32	5.3	5.6	3.8	7.5	4.1	8.8

주1) 각 분야별 응답합=100%
주2) 청년층과 비청년층 비교에서는 '*공공기관채용확대'의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주3) *성별은 '공공기관채용확대', '기업인센티브확대', **지역별로는 '지원금확대', '공공기관채용확대', '기업인센티브확대'
***취업여부별로는 모든 문항의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p<0.1)

4)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에 대한 선호도

○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는 청년층과 비청년층 모두 '다양한 청년 집단의 고려'를 선택, '1인당 지원금액 확대'는 연령층간 의견 차이 大

-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 1순위로 '1인당 지원금액 확대'를 선택한 경우가 비청년층은 9.8%, 비청년층은 4.0%, 체감도에 있어서 집단간 큰 차이
- 마찬가지로 직접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과제인 '대상 인원수 확대', '정부 직접 일자리(임금 지원) 개발'에 대한 비청년층 의견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는 매우 긍정적으로 의견차 大

○ 청년내 세부집단에 상관없이 '다양한 청년 집단의 고려'가 최우선적 과제, 후순위 과제들에 대해서는 각 집단별 차이

- 청년 여성이 '다양한 청년 집단의 고려'에 대한 필요도를 청년 남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 차이도 상대적으로 큰 편, 후순위의 경우에도 남성('청년고용 기업인센티브 확대')과 여성('정부 직접 일자리(임금지원)')간 차이
- 미취업 청년은 '다양한 청년 집단의 고려'를 중요시한 반면, 취업 청년은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의견 多

<표 4>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

Q.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 청년층 vs. 비청년층 (%) >

< 청년층의 성별·지역별·취업여부별 비교(1+2순위) (%) >

	N(명)	성별		지역		취업여부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	미취업
다양한 청년 집단의 고려	175	20.8	27.1	23.2	24.8	22.3	28.1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107	16.4	12.7	13.5	16.0	16.0	10.8
청년 참여 정책결정	103	15.0	13.0	13.8	14.4	14.7	12.3
원하는 정책 선택 · 이용	86	11.3	12.1	10.9	12.9	11.9	11.3
정부 직접 일자리(임금지원)	83	9.5	13.3	11.8	10.7	11.9	9.9
1인당 지원 금액 확대	67	10.3	7.9	9.9	8.2	8.3	11.3
대상 인원수 확대	64	9.0	8.5	10.1	6.9	8.7	8.9
정책 홍보 강화	48	7.7	5.4	6.8	6.3	6.2	7.4
기타	5	0.3	1.1	1.0	0.3	0.7	0.5
합계	7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전체 응답합 =100%, '기타' 표시제외
주2) 연령층간 1순위 응답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p<0.05)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청년층 및 비청년층 모두 기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절반 이상이 공감, 기존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대안없는 비판'으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불가

- 두 집단 모두 기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절반 이상이 동의, 특히 '공공기관 채용확대', '1인당 지원금액 확대' 등 新정부가 부정적인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유념
- 또한 청년층 중 3명 중 1명은 '성장' 가치를 선호, '공정' 가치에 매몰된 단편적 주장이 아니라, 공정과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함께하는 성장형 청년 일자리'로서 새로운 일자리 비전 필요
-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에 대한 비청년층의 인식이 기대보다 낮은 편, 청년 일자리는 현재 및 미래의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청년일 자리를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국민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강화 필요
- 민간일자리 개발을 위해 강조되어 온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용인센티브를 대기업으로 확대·강화함으로써 청년 눈높이 일자리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 필요
  - '일자리으뜸기업[3]', '청년친화강조기업[4]' 등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선정('21: 대기업 20개소, 중견기업 33개소, 중소기업 47개소), 일자리으뜸기업에게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1~3년간 제공

4)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인식개선

○ **청년 집단간 정책 선호도에 대한 뚜렷한 차이 존재, 특히 청년 여성과 미취업 청년들의 현실적인 필요도를 반영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고용안정망 강화가 최우선의 실사구시 정책**

- 성별 청년 집단간 차이가 뚜렷한데 청년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불리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공정 및 부패에 더 민감, 청년기 대부분을 출산과 육아로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들에서 소외 가능, 경력단절 등에 의한 취업취약 청년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

  • 여성 일자리 영역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 확대), 여성 맞춤형 직접일자리 다양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5]의 기능 고도화(창업지원 강화 등) (<표 5> 참고)

- 지역 활성화의 주역인 비수도권 청년의 일자리 정책은 정책 선호도를 반영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비수도권의 '청년채용장려금' 확대를 추진, 상대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미온적인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반으로 '수도권 특화 상생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개발을 고려

- 미취업 청년에게 부동산 정책보다 '일자리 정책' 이 시급, '채용지원금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1인당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고, 특히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정부가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실무형 일경험(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필요

  • 청년 4명중 1명은 인턴·실무경험 부족으로 구직하기 어렵다고 호소[6], 新정부가 '세금일자리' 라고 비난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들이 미취업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실사구시의 정책임을 인식

및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입직을 유도('21: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중복 제외: 1,214개소))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여성가족부 산하)

6) 구직활동시 어려움: 인턴십, 실무경험 등 기회 부족(23.8%) → 취업이 안될 것 같은 불안감(23.4%) → 취업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19.8%) → 어학점수, 자격증 등 스펙(18.0%) 등(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22. 1. 24))

〈표 5〉 청년 집단별 일자리정책 방향(안)

집단 구분		내 용	공 통
성별	남성	• 여성의 육아 및 경력단절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공감대를 강화(ex.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젠더 문제 완화 지향 • 청년 참여적 정책개발 기회 마련(이를 통해 불공정불합리 인식 개선)	• 청년 집단별 다양성 고려,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 필요 • 청년대상 직접 지원보다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일자리 개발**에 역점 • 특히 **취업지원금 및 공공기관 채용확대 등 정부의 직접 지원 지속** 필요
	여성	• 청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육아·가사·돌봄의 동시적 통합적 해결에서 시작, 체감적인 워킹맘 지원 정책 추진(ex. **육아·가사·돌봄을 통합한 워킹맘기본권(가칭) 제정**) • 청년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다양화(ex. **여성일자리 영역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K-디지털 크레딧 대상 확대, 여성 맞춤형 직접 일자리 다양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 고도화**)	
지역	수도권	• 상대적으로 지방 청년 일자리 정책 비중이 높아 수도권 청년 정책 소외, 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고려(ex. **'도시형'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비수도권	•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방활성화 정책의 질적 개선 강화(ex. **지역청년정책의 부처간 (유사)사업 통합 및 규모의 경제 지향 등**) • 지역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공공기관 채용확대 정책의 지속(ex. **청년이음 프로젝트[7] 확대/강화, 비수도권 청년 대상 청년채용 장려금 확대(또는 신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비율 확대 등**)	
취업여부	취업자	• 육아 및 경력단절 해결을 위한 지속 노력(ex. **청년정책 사업의 청년워킹맘/워킹대디 할당제 도입 등**) • 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소통 창구 마련, 정책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미취업자	• 미취업 청년들의 참여적 일자리 정책 개발 강화(ex. **미취업 청년에 의한 자기선택형 일자리 지원 방식의 도입 등**) •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금 및 고용안전망 집중 강화(ex. **장기미취업 청년(NEET)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참여형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 일경험(실무형 청년인턴십) 및 불완전 취업자 대상 교육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등**)[8]	

7) 희망이음 프로젝트: 지역기업과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탐색 및 인식개선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지역안착 유도 ('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12년 정규사업으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8)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치단체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최근 6개월 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 없음) 등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개발 및 운영 지원. 문화·복지·안전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확대 지원(지자체가 직접 설계·기획, 행정안전부 지원)

[부록] 조사 개요 및 응답자 분포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 응답자 수 : 1,000명
- 조사 기간 : 2021년 9월 13일 ~ 9월 15일 (2일)
- 표본 추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을 고려한 층화표본추출
- 조사 지역 : 17개 시도 (세종 포함)
- 표본 오차 : 신뢰도 95% ± 3.10%
- 조사 방법 :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응답자 분포

			응답자 수(명)	(%)
청년층 (20~30대)				
	연령	20대	180	48.8
		30대	189	51.2
	성별	남자	190	51.5
		여자	179	48.5
	지역	수도권	209	56.6
		비수도권	160	43.4
	취업여부	취업자	267	72.4
		미취업자	102	27.6
	정치성향	진보	73	19.8
		중도	215	58.3
		보수	81	22.0
	소 계		**369**	**100.0**
비청년층 (40대 이상)			**631**	-

주1) 미취업자: 주부, 학생, 무직자
주2) 비수도권: 경상, 전라, 충청, 강원/제주지역